

“탄력근로제 현 3개월은 짧아... 1년으로 연장을”

전경련,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

탄력·선택 등 4개 근로유형 제시
“유연근로제, 환경맞춰 개선해야”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이 6개월 간의 제도 기간을 두고 있지만,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연근로제는 업무량 등에 따라 노동



2일 서울 영등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제도를

진 변호사는 활용 가능한 유연근로제의 4가지 유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를

제시했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소정 근로시간만을 따지도록 판결했지만, 고용부는 소정 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휴주 근로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인 급여가 고용부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송 변호사는 “향후 최저임금제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면 근로시간 수 계산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도 노사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반기에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이 변경되며, 기업 경영기밀 유출 논란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급격한 노사제도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이 기업 경영의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당장의 혼란은 막았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며 “유연근로제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3개월에 불과해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 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하고,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늘어난 여가시간 ‘문화가 있는날’이 채운다

여가활동 만족 27%·불만족 26%
문체부, 문화 공연·전시·영화 등 직장인 맞춤 행사 등 프로그램 확대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과 함께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문화 공연, 전시, 영화 등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 맞춤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를 전하며, ‘문화가 있는 날’에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여가시간 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27.2%, ‘불만족’하는 사람은 26.2%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54.2%의 응답자가 ‘경제적 부담’, 24.4%가 ‘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향후 문화예술을 통해 여가생활을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38.5%로 나타났다.

〈문화가 있는 날 분야별 혜택〉

분야	혜택 내용
영화	전국 영화관(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매월 400개 관 내외)에서 영화를 5,000원에 관람(오후 5~9시)
공연	연극·뮤지컬, 음악·연주회, 무용 등 공사립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 무료·할인 혜택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등 공사립 미술관·박물관 전시 무료·할인 관람, 개관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도서 대출 권수 확대, 연장 개관 및 교육·체험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주요 문화재 무료개방
스포츠	프로 야구·농구·배구·축구 등 종목별 스포츠관람 50% 이상 할인 및 특별 이벤트

/자료=문체부

이에 문체부는 올 하반기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매월 일상 공간에서 펼쳐지는 감성콘서트 ‘집콘’은 오는 25일 문화가 있는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서울 스튜디오 콘크리트)이란 주제로 준비돼 있다. 직장인들을 위한 공연과 함께 마련될 이번 집콘은 직장인들의 다양한 삶을 조명하고, 그들만이 겪는 고충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네이버 티브이(TV)와 브이 라이브(V LIVE) 생중계를 통해 집에서 감상할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일터에서 즐기는 막간의 휴식 ‘직장문화배달’이 하반기에도 준비돼 있다.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직장으로 찾아가 수준 높은 공연을 ‘배달’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영위하는 환경을 조성한 기업인 ‘여가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될 시, 직장문화배달에 참여했던 기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79개의 기업이 해당인증기업에 속해 있다. 하반기에는 출판 산업과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고, ‘도깨비책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범종 기자 joker@



대화하는 한-룩셈부르크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확대회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브리핑

국토부, 대형 건설현장 안전체계 불시점검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대형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

국토부와 민관 합동점검반은 공사비 1000억원 이상,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년대 비교해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된다.

국토부가 산재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5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1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명)과 비교해 28명 줄었다. 그러나 대형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2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본부 주관으로 중앙합동 점검단(단장 기술안전정책관)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씩 불시에 점검키로 했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직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산하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도 포함된다.

/채신희 기자 csh9101@

백운규, 기업 방문 노동시간 단축상황 점검

(산업부 장관)

안착방안·애로사항 등 청취

이달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기업들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참여를 호소했다.

산업부는 백 장관이 2일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소재 기업인 (주)동진세미켐을 찾아 노동시간 단축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노동시간 단축 적용 대상이 되는 수출 중견기업으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하반기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에 대비,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소통하기 위해 이뤄졌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

檢, 조양호 구속영장 청구

횡령·배임 등 위반 혐의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과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범종 기자 joker@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4일부터 8월 1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최근 고갈·감소되고 있는 명태와 대구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이 신설된다. 해수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

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 자원 회복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중 금어기 신설에 따라 기존에 있던 명태 포획금지제정에 대한 규제는 삭제한다.

또한,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을 1월로 일원화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은 부산·경남지역은 1월, 그 외 시·도는 3월로 각각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산란기인 1월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세종=최신용 기자